

특별기고

‘정주형 가족이민 Go속도로’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전남도의 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농어촌은 일손 부족으로 수확을 못 하고, 중소제조업은 구인난으로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이와 반대로 도시는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몰려 있지만, 높은 주거비와 과밀로 삶이 피폐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시골과 도시가 공생하는 ‘정주형 가족이민’을 본격 논의하고 실행할 때다.

그동안 우리는 계절·단기 중심의 인력 공급에 의존해 왔다. 급한 불은 끄지만, 학교·지역의료·주거·공동체와 연결되지 못한 채 ‘단절된 노동’으로 남기 일쑤였다. 이제 는 가족이 함께 이주해 정착하고, 아이가 지역에서 자라며, 배우자도 일·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정주형 모델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학교를 지키고, 부모의 경제활동은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며, 건강한 가정은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킨다. 인구 감소와 인력난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전남은 지역특화비자에서 출발해 광역형 시범사업을 거쳐 광역형 비자 본사업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준

비하고 있다. 핵심은 ‘현장 매칭~정착 지원~체류 안정’의 삼박자를 갖추는 것이다. 공공은 언어·주거·법률·노동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농가는 양질의 일자리와 숙련 경로를 제공해 단순노무를 넘어 지역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광역형비자 본사업에 대비해 전남은 농어촌 지역에 가족 동반을 원칙으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주거는 빈집과 공공임대를 리모델링하고, 교육은 자녀의 한국어·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자리는 주 신청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함께 배우자 취업도 돕겠다. 성실근무와 지역 기여에 따라 장기체류·영주 전환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주, 정착, 영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놓겠다.

전남의 구조적 인구감소는 획일화된 출산정책만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고령화, 산업 재편, 학령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민은 즉각적인 노동공급과 중장기 인구 기반 확충을 함께 가져온다. 특히 가족 단위 영주는 △학교 유지 △지역 소비 확대 △산업 숙련 축적 △공동체 회복이라는 네 가지 선순환을 촉발한다. 이민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제로섬’이 아니라 빈자리와 성장여력을 잇는 보완재다. 우리는 이민을 받아들이되 선발·정착·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이민정책을 명징하게 설계해야 한다.

정주형 가족이민의 전제는 권익과 안전이다. 전남형 모델은 표준근로계약과 임금체불 상시 모니터

링, 공공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 매칭과 상담, 온·오프라인 한국어·기초학습 지원, 국가별 커뮤니티와 상호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정주형 가족이민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계·추진할 때 성과가 난다. 국가는 최소기준과 안전장치를 제시하고, 지역은 수요에 맞춘 설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재정과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

이에 따라 2027년 광역형 비자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체류자격 제한을 걷어내고, 광역 단위가 직종·규모·선발 기준·정착 패키지를 설계하되 국가는 권의·안전의 최소 기준, 사후평가, 브로커 차단을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비자정책에 인구감소와 인력부족 지표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쿼터 배분, 심사 가점, 재정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출입국·고용 등으로 분산된 체계를 국가이민처와 지방이민청으로 일원화해 비자·고용·정착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예산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중앙과 지역이 한 팀이 되어 설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해야 지역 이민이 성공할 수 있다.

전남은 이미 지역특화비자로 이민의 문을 열었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제도를 확장하고 있다. 이제 농어촌 가족 단위 이민비자를 설계하는 광역형 비자 본사업으로 성큼 다가설 때다. 빈집이 살 집이 되고, 빈 교실이 사랑의 교실이 되며, 주인 잃은 빈자리에 사람이 넘쳐나는 전남, 정주형 가족이민이 꼭 필요하 이유다.

기고

작은 기부가 만드는 따뜻한 고향의 내일

엄지범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우리 농촌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와 현장의 체감 모두가 “지방만의 노력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 제도를 넘어,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민 참여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도구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지자체 히가시카와를 방문했다. 인구 8000명 남짓의 농촌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인구가 늘고 청년 이주가 활발한 ‘예외적인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지역의 차별성은 ‘고향 납세’를 단순한 재원 확보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잇는 ‘관계 자본’을 쌓는 장치로 활용해 왔다는 점에 있다.

히가시카와에서 기부자는 일회성 ‘고객’이 아니라, 지역의 소식을 꾸준히 나누는 ‘이웃’으로 대우받는다. 기부금은 장학사업, 사진문화학교, 예술 프로그램, 이주 정착 지원 등 미래 인구 기반을 키우는 분야에 우선 투자되고, 사용 내역과 성과는 정기적으로 기부자에게 공유된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라고 말한다. 작은 기부가 지역정책의 플랫폼이 되고

공동체 분위기까지 바꿔놓은 사례다.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본 구조도 유사하다. 거주지 외 지자체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그 재원을 활용해 지역 사업을 추진한다.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지역 재정 확충, 시민 참여, 지역상품 판로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도입 초기인 지금,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내일을 여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한 ‘재정사업 항목’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실험의 그릇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부금을 여러 행사 예산에 흩어 쓰기보다 청년 정착·돌봄·교육·마을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때 제도의 효과는 분명해진다. 지자체가 매년 고향사랑기부금 운영계획을 세우고, 어떤 변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주민과 기부자에게 투명하게 제시한다면 기부는 자연스럽게 지역의 미래와 연결된다.

답례품 경쟁의 과열을 겪은 일본의 경험도 참고할 만하다. 답례품은 필요한 요소이지만 제도의 무게 중심이 세제 혜택과 물질적 보상에만 쏠릴 경우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성과와 이야기가 함께 전달될 때, 고향사랑기부제는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부 효과를 보여주는 방식도 중요하다. 기부금이 어느 사업에 얼마 쓰였는지를 넘어서, 몇 명의 아이가 장학 지원을 받았는지, 어떤 청년 팀이 창업에 도전했는지, 어떤 마을의 돌봄 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를 정량·정성 지표로 함께 제시할 때 시민들은 이 제도를 보다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작은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경험 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민에게는 크지 않은 선택일 수 있지만 지역의 시간으로 보면 재정 구조와 거버넌스, 공동체의 회복력을 서서히 바꾸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농촌과 중소도시에서 청년 유입과 정착을 고민하는 지자체가 이 제도를 청년정착·주거·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활용한다면 기부금은 일회성 수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가능할 것이다.

작은 기부가 만드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제도 설계자는 그 잠재력을 살리고, 지자체는 각 지역의 사정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운영하며, 시민은 이 제도가 만들어 내는 변화를 함께 지켜보며 공감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

그렇게 제도와 지역, 시민이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설 때,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을 살리고 고향의 내일을 열어가는 따뜻한 장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취재수첩

광주FC, 올 시즌 유종의 미 거두길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광주FC는 올 시즌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

창단 이후 처음 참가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무대를 비롯해 K리그1, 코리아컵을 병행하게 되면서다.

그럼에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먼저 올해 ACLE 16강전에서 바셀 고베를 1·2차전 합계 점수에서 앞서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비록 8강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지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다.

역대 시·도민 구단 중 ACL 무대에서 8강에 오른 건 광주가 최초다. 더욱이 2024~2025 ACLE에 진출했던

울산HD와 포항스틸러스가 리그 스테이지에서 탈락한 가운데 광주가 유일하게 8강까지 진출하며 K리그의 자존심을 지켰다.

광주의 활약은 코리아컵에서도 이어졌다.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에서 부천을 1·2차전 합계 4-1로 앞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광주가 코리아컵 결승에 오른 것 또한 창단 후 처음이다.

이로써 오는 12월 6일 전북현대와 서울윙즈컵경기장에서 우승 트로피를 건 마지막 대결을 펼치게 됐다. K리그1에서는 소기의 목표를 이뤘다.

지난 35라운드 제주SKFC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면서 최소 9위를 확보, 1부리그 잔류에 성공한 것. 이로써 3년 연속 K리그1 잔류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제 광주에게 남은 과제는 K리그1,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최근 광주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HD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37라운드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홈 최종전이었던 이날은 프리드온스와 최경록이 득점포를 터트리면서 공격력을 과시했다.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한 광주는 14승 9무 14패 승점 51점을 기록, 안양(승점 48)을 제치고 리그 7위에 올랐다.

앞으로 파이널 라운드 종료까지 남은 경기는 단 1경기. 30일 예정된 수원FC전이다.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거나 승리를 따낸다면 파이널B 최고 순위인 7위를 자력으로 확정지을 수 있다.

특히 이 경기는 코리아컵 결승전을 앞두고 광주의 전력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광주는 앞서 K리그1 잔류가 확정된 순간부터 본격적인 코리아컵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 남은 경기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려 최상의 조합을 찾겠다는 계획이었다.

K리그1 최종전인 수원전은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여기서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올 시즌 절대1강 전북현대를 꺾고, 구단 역사상 첫 코리아컵 우승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민구단의 한계를 넘어 기적을 만들어왔던 광주가 K리그1 최종전과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팬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란다.

사설

‘인공태양’ 나주 유치 순조롭게 진행되길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로 나주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부지 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나주시와 전북 군산·경북 경주 등 3개 지자체가 뛰어들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과기부는 지역현장실사 평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연구시설의 장기적 운영에 필수적인 지질 안정성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내세운 나주시를 1순위 후보지로 결정한 것이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은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모방해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결합해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을 말한다.

바닷물속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자원이 사실상 무한한데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폭발 위험이나 방사능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맞먹는 전력을 생산할 만큼 효율적이어서 기후위기와 AI 전력수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고갈 위기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게임체인저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에너지원이라는 얘기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그동안 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후보지인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단이 지진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반을 갖추고 있는 점,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에너지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는 점, 시설에 대한 주민수용도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나주시가 핵융합 연구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특히 나주시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정부 부처 건의 활동, 간담회 개최, 유치 전략 영역 발주, 전시시 시민운동, 홍보 활동 등 유치를 위해 말 그대로 ‘올인’했다.

과기부가 이의신청 등을 거쳐 다음 달 부지를 최종확정하면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 착공해 2037년 완공을 목표로 1조 2000억원 규모의 연구시설 조성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정 지역에 300여 개 기업 입주와 최대 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10조원이 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이 사업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영농형 태양광’ 돈 되지만 제도적 한계 많아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인기다. 발전 수익이 벼농사 단일 경작때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농가 경영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즉, 농지 보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충족하는 신 농업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현재 전남에 있는 지역 ‘영농형 태양광’시설은 총 28개소로 발전 규모는 2528kW 규모다.

지역별로는 나주 16개소, 보성 4개소, 순천 3개소, 강진 1개소, 영암 1개소, 해남 1개소, 고흥 1개소, 영광 1개소 등이 있는데 아직은 실증 중심의 소규모 운영이라고 한다. 최근 경제성이 속속 확인되면서 현장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영암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직영 농 1000㎡에 45kW 태양광 설비를 설치, 올해부터 벼 재배와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실증재배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 순수 벼농사만 할 때보다 8배가 넘는 매출 효과를 거뒀다.

일조량 감소로 벼 수확량은 벼농사만 지은 같은 면적의 대조 논(668kg·쌀 판매수익 117만원)보다 수확량은 21% 줄어든 525kg(수익 92만원)에 그쳤지만, 1년 간 4만8499kWh 전기를 생산, 897만원의 매출이 발생해 이를 상쇄하고도 약 872만원 수익이 늘어난 것이다.

‘보성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도 농지 2145㎡에 99.7kW 설비를 설치, 벼농사와 발전을 병행한 결과 지난해 벼 재배 수익 141만원, 발전 수익 1292만원 등 총 1433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에 내년까지 국내 최초 주민 주도형 3MW 영농형 태양광 상용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등에는 RE100 전력 공급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농지법 문제, 수익분배 기준 부재, 전력망 연계 불확실성 등 사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	---